

디지털 금융의 메카: 부산의 로드맵

디지털금융센터 소장
최 공 필

* 본 연구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

목 차

〈요 약〉

- I. 배경과 취지
- II. 전략적 목표로서의 디지털 금융
- III.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방법과 실행과제
- IV. 디지털금융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요 약

부산의 차세대 금융중심지 전략은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환골탈태 차원의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를 근간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함. 부산의 지리적 배경과 인적자원을 주된 기반으로 한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 재원을 자발적 연결을 토대로 디지털 시장을 주도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 구체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원칙의 토대 위에서 개방형/참여형 플랫폼을 차분히 확보해 나감으로써 부산의 변화가 글로벌 추세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특히 레거시 체계가 견실한 우리나라의 배경 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려면 **데이터와 AI활용에 기초한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법과 규제의 틀도 보다 선진화되어야 함. 특히 차세대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디지털 금융의 건설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현실에 접목하는 일련의 검증절차를 주도하면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앞장서는 책임 있는 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필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자생적 변화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시장신뢰와 공감대 확보가 핵심이므로 catalyst 역할을 위한 특구차원의 전략적 틀을 갖추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과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준비할 필요. 특히 지리적 개념을 넘어선 분산형 네트워크 개념의 특구로 디지털 인프라투자를 유치하고 규제의 틀을 정비함으로써 필요한 변화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점차 키워 나갈 필요. 부산은 이러한 과감한 제안을 수용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금융중심지의 위치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음. 결론적으로 부산금융중심지 전략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 있는 모든 요소를 함양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글로벌 참여자들이 시장 트렌드에 밀착한 가치창출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I. 배경과 취지

- 과거 십 수년간 부산 디지털 허브전략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실제 금융 분야의 국제적 입지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는데 이는 허브전략의 참여 주체가 극히 제한적인 데다 외연확장이 제한적이어서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자체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 불특정 다수가 부산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미래 혁신을 주도하려면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참여자들에게 자율과 책임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개방적 시장 환경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정치싸이클에 민감하지 않은 환경의 일관성)
 -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의 경제활동 기반인 플랫폼위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적절한 규제가이드 라인의 준비가 필수적임.
 - 향후 모든 참여자들의 개방적 의견개진과 피드백 경로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참여자들의 점진적 위축으로 생태계 자체의 발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 특히 공적분야의 역할과 시장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 위주의 혁신드라이브는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대마불사의 원칙을 더욱 부각시키는 부작용마저 키울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부산이라는 미래 금융역량의 산실에서는 참여자 모두 향후 금융생태계가 균형 잡힌 발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조율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민관포함 모든 참여자들이 공히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즉, 디지털 네트워크로 형성된 다면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참여방식을 존중할 필요).

1. 중심지 목표 설정의 타당성

- 부산 금융허브 전략의 목표는 글로벌 차원의 금융역량을 확충하여 경쟁요소를 유치하고 금융허브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종종 수요기반과 동떨어진 개발운영자 중심의 시각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민간참여가 저조하게 되

어 역량 확충면에서 한계에 봉착(기존 레거시들의 주요 참여자들은 관망적 자세로 일관하고 스타트업 위주로 운영됨)

-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 창의력이 구현되려면 환경적 제도적 틀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레거시 주도의 배경 하에서 분명한 한계 노정(정무적 판단과 핵심적 추진주체 위주로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잠재적 관심주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구도)
 -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이후 기존 금융의 작동방식(인적 교류와 연관기반)이 언택 위주로 바뀌면서 외형적 목표보다는 초연결 환경에서 금융접근성에 기초한 금융의 본질적 기능강화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음.
 - 급변하는 환경이지만 금융은 심각한 양극화로 심화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산업 니즈에 부응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는 보다 결정적인 역할 수행
- 따라서 부산이 미래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핵심적 경쟁요소를 사전에 준비하고 확충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강화시켜야 함.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요구되는 부산의 목표는 총체적 해법으로서의 디지털 금융 허브임.
 - 따라서 양극화 해소와 금융접근성 제고는 금융허브전략의 가장 확실한 목표임. 이를 위한 스마트 규제 도입이나 디지털 ID의 활용, 그리고 금융의 기본 소양(digital literacy)함양과 UI/UX차원의 편의성 제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균형 있게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

2. 기존 전략의 업데이트 필요성

- 부산은 이미 십수년전 부터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금융허브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 냈음.
- 특히 최근 수년간 부산은 핀테크 관련 금융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귀중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금융혁신 관련 시도들이 구체화된 바 있음.

- 문헌단지의 국제금융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금융인프라 차원의 준비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블록체인 특구로서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전략을 구사하는 등 환경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음.

□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이러한 실험적 준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산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금융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 수행

- 과거 부산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금융의 신뢰기반인 공적 기구들의 부산 유치를 통해 최소한의 기초여건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임.
- 부산 금융허브 전략의 배경은 기존 서울중심의 레거시 체제와 복잡한 법과 규제 체계 하에서 새로운 혁신의 씨앗을 키우기 어렵다는 인식과 부산의 우월한 잠재적 가능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됨.
- 실제 이러한 전략은 초기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금융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
- 다만 디지털 추세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략상의 추진력이 저하되고 초기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는 퇴조양상이 관찰됨.

□ 최근 10여년 전부터 전통적인 레거시 공적 기구의 신뢰 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한계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미래발전을 주도하고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 수행이 부진해지는 경향

- 이는 디지털 환경이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대안들이 속출하는데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공적기구 중심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 내부적으로 기존 산업 인프라 관련 수요가 대부분 충족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데다 신뢰주체들의 집중화로 인해 외부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감응도가 저하되는 경향
- 그 결과 부산의 배후산업기지의 규모나 주변 경제적 기반을 감안할 때 금융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산업 수요적 측면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자체

의 역량은 외부참여의 확대없이 현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고착화됨 (효율성이 높아지더라도 보다 큰 시장의 확보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은 개선되지 못함).

- 따라서 코로나 사태이후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은 더 이상 부산이라는 지리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거대한 변화 흐름을 활용한 근본적인 차원의 개혁을 통해 차세대 디지털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음.

□ 무엇보다도 본질적 차원의 변화가 절실했던 배경으로는 코로나 사태이후 자택근무가 보편화되고 untact 경제가 자리잡으면서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확산이 자리잡고 있음(메타버스상의 이벤트나 회의방식에도 상당한 진전).

- 그러나 현실과 접목되지 않는 디지털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 부산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추진력 확보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기 어려움.
- 즉, 글로벌 차원의 변화가 부산이 추구하는 변화와 목표가 일치해야 하며 부산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제공하고 함양하는데 다른 곳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을 시장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어야 함(포용적 디지털 전략의 핵심).
- 특히 부산의 주어진 산업입지가 조선 및 물류산업위주로 발전하면서 아직은 국책은행 중심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새로운 금융역량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별개로 작동하는 현상
- 이는 새로운 금융역량이 새로운 산업의 유치와 발전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투자와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새로운 신뢰토대)가 취약하여 산업기반의 다변화나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결과임.
- 만약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금융기능이 확충되었다면 현재 신용흐름이 제공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업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부산의 기존 산업 및 미래 산업의 잠재적 경쟁력이 다양하게 구현될 것임.
- 지속적인 중심지 전략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변화추세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체제와 주어진 산업여건의 선진화나 다변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괴리가 관찰되면서 근본적 차원의 기존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따라서 기존 전략의 업그레이드는 부산을 위한 전략의 핵심이 부산을 포함한 전 세계적 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폭 수용하는 데서 출발(부산 연고와 부산 내의 기관들 참여만으로는 글로벌 어필이 불가능)

- 부산은 부산을 넘어선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와 결합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혁신 친화적 문화배경, 이질적 배경에 대한 포용성 등 무형의 환경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지리적 부산의 개념에서 벗어나 미래 추세의 모든 핵심역량을 준비하고 확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제반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과 유지

기존 전략의 업데이트 사안¹⁾

- 허브전략의 목적, 지배구조, 접근방식: 애매모호한 허브추진 주체 및 정책당국의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허브전략의 핵심적 리더십이 불투명한 상태(리더십의 모호성이 신뢰기반 구축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 AUM, 시장규모, 거래량, 기관의 수, 인력 등의 기존의 양적 실적 평가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기준과 척도의 개발
- 국내의 비경제적 요인에 민감하지 않는 민관 협동차원의 독립적 허브추진기구 (공적 기관의 설립)
- 세제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치유인을 강화하되 과도한 행정간섭 배제
- 자발적 자생적 성장기반이나 차세대 성장동력의 출현가능성 제고(moonshot project)
- 주도적 변화가 아닌 추종적 적응 자세: 서울중심의 정책에 의존하는 주변적 위치

1) 일련의 업데이트 과제는 기존 체제를 기반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환경과 기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3. 지배구조와 조직의 문제

- 우선 현 레거시 체제의 지배구조는 수직적 체계에 근간을 두었으며 책임과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조직적 특성은 기본 토대인 법과 규제의 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시장법, 특금법, 외환거래법 등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정작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규제 틀이나 법적 기반이 영역 간의 결합과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서비스들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임(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시 기존 법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사례 빈번).
 - 그 이유는 디지털 환경의 가장 핵심적 특징인 연결성과 접근성이 과거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레거시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창출이나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
 -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며 이는 레거시의 재편성 과정에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과거 금융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레거시 체제의 것과 본질적으로 상이함.
 - 예로, 새로운 자산운용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행동 데이터까지 활용해야 패턴파악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추출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존 레거시 체제에서 통상 배제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나 기구들이 관여하게 됨.
 - 이러한 본질적 변화를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여 집행하는 관행은 책임있는 혁신을 저해하고 기존 기득권에 침착시키는 관행으로서 지대추구적 상황과 시스템 차원의 위험관리상 근본적 한계를 보이게 됨.

4. 레거시 금융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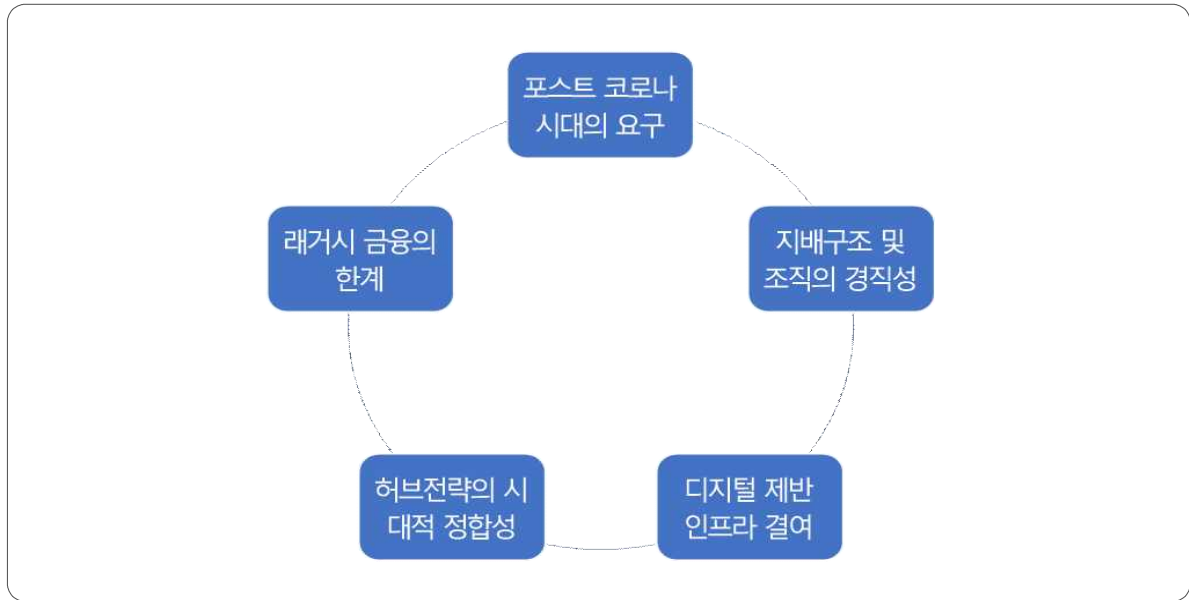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은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기존 레거시 체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경기순환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신용싸이클(procyclical credit cycle)과 버블, 그리고 경기 진폭의 확대 및 시장 작동이 국면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임.
 - 작금의 FTX 사태에서도 거듭 경험하듯이 기존 레거시 체제의 위험관리방안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사후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불가피한 충격발생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부작용(death spiral)
- 사전적인 건전성차원의 규제강화(prudential regulation)는 시장작동을 위축시키고 자발적인 위험관리를 저해하는 인센티브 차원의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최근에 크립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용흐름의 급격한 퇴조나 기존 금융흐름의 마비현상은 제도권 밖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과 더불어 규제의 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데서 초래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음.
 - 금융감독과 규제의 방향도 최대한 네트워크 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디지털 금융의 작동원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방향의 진전은 매우 더딤.
 - 따라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이슈들은 차세대 금융허브를 도모하는 부산의 입장에서 금융 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점임.
 - 즉, 한계를 노정하는 기존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공적 장치가 동원되는 레거시 전통의 시장 비중을 키워가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조정비용을 높이는 비합리적 선택임.
 - 별도의 신뢰구축 기반을 허용하여 디지털 금융의 발전토대가 균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설계하고 키워나갈 필요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환경의 도래

- 레거시 체제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디지털 환경이 대세로 자리잡고, 코로나 사태이후 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도입되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요증가는 이제 대세로 자리잡고 있음.
 - 이러한 강력한 환경변화 또한 지금까지 견지한 부산금융 허브전략의 전면적인 개편과 수정의 필요성을 일깨워 줌.
 - 따라서 점진적 보완적 차원을 넘어선 체제적 개혁차원의 변화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래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지금까지의 대응방식과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제부터라도 정부 등의 공적기구가 중심지 전략을 주도한다는 시장의 선입견을 최대한 불식시키고 독립적이고 글로벌 차원의 민관합동 기구 또는 미래전략중심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를 통해 시장에 밀착한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기구를 제외한 신설기구와 새로운 지배구조는 외부의 빠른 추세변화에 뒤쳐지고 있음)²⁾
-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온 부산 허브전략을 코로나 사태이후의 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 폭넓은 관점과 포용적 자세: 일단 추진 계획의 ESG기준을 반영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를 넓혀야 함.
 - 블록체인 등 차세대 지배구조와 포용적 시장기반을 적극 수용하는 전략적 특성을 부가
 - 부산을 위한 전략이지만 글로벌 시각에 부합하는 포용적 개방전략을 표방
 - 달러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안적 분산금융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Trust-building toward a hybrid system(legacy+crypto))

2) 특히 정부포함 기존 신뢰주체들이 주도하는 경우 역선택 효과로 인해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확보된 주체들의 참여가 부진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공공부문은 규제와 틀이나 배후 여건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필요.

[그림 1] 부산금융허브전략의 개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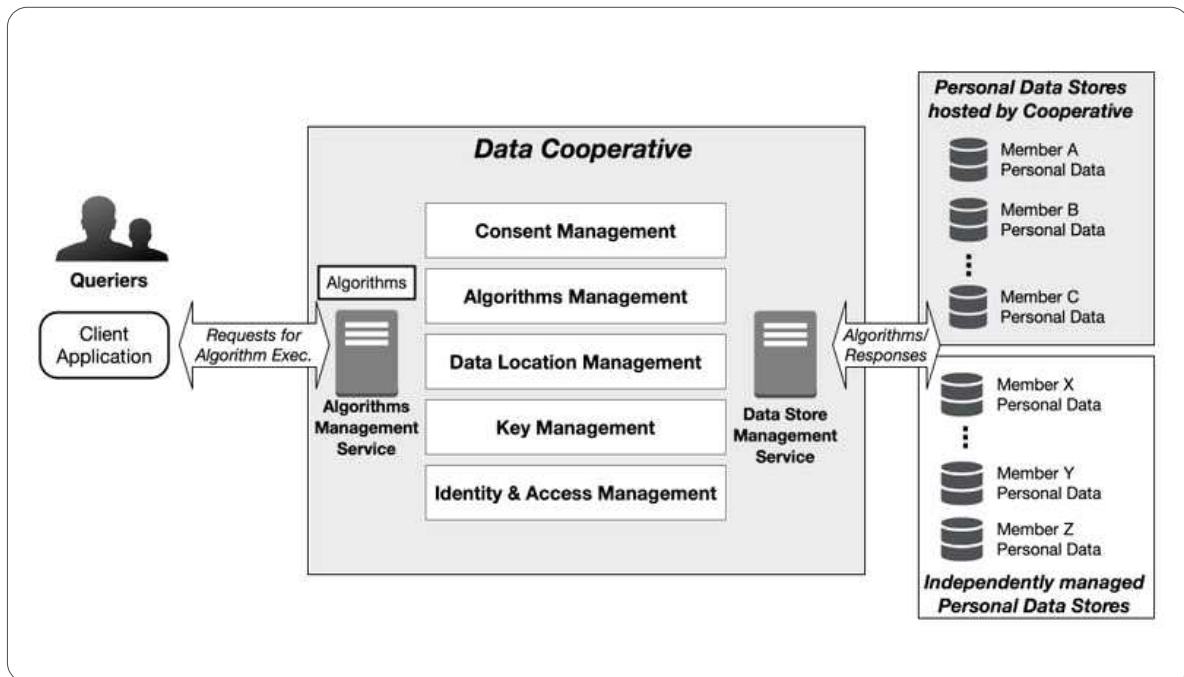
II. 전략적 목표로서의 디지털 금융

- 위에서 지적한 기존 전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고려의 핵심사안: 포용성과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미래성장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금융은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사료됨. 이는 디지털 금융이 내포하는 명확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가능하기 때문임.
- 1) 다면적 연결환경에서 누구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 2)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듭된 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
- 3) 디지털 금융을 성공시키려면 기존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기준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므로 미래 성장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는 이점
- 4)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디지털화에 수반되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관련 불확실성 등 각종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극 대비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기존 전략의 5가지 문제점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극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면 향후 전략의 핵심을 디지털 금융을 이해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중심으로 전개해 나가야 함.
 - 이와 같이 디지털 금융의 핵심역량 확보와 이를 통한 기존의 문제해결과 새로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수립은 디지털 경제의 리더십 확보에도 결정적으로 중요
- 디지털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소수 신뢰주체들의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레거시 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중개비용이 낮으며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두에게 최소한의 금융서비스가 보장된다는 점임.
 - Davos 회의를 포함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는 회의결과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특성상 이러한 전환은 사전준비와 위험관리 능력을 동시에 구비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디지털 금융의 또 다른 영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남: 첫째, 데이터 기반 AI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지방도시로서의 다양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구비하게 됨.
 - 실로 AI는 결정도구로서의 역할 외에도 기존 체제상의 경직성과 지배구조상의 폐쇄성을 넘어선 우월한 결정을 가능케 함.
 - 가장 중요한 결정지원 엔진으로서 AI는 지배구조상의 이슈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며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문제는 보다 나은 해법의 추구가 가능해도 과연 정치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개진예정.
- 둘째, 새로운 지배구조의 사례로서 해석 가능한 블록체인은 수직적 체계와 중간 신뢰주체들의 역할의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레거시 체제의 한계를 수평적 연관과 참여형 시스템 검증과정을 통해 극복하게 되므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과 제공이 가능해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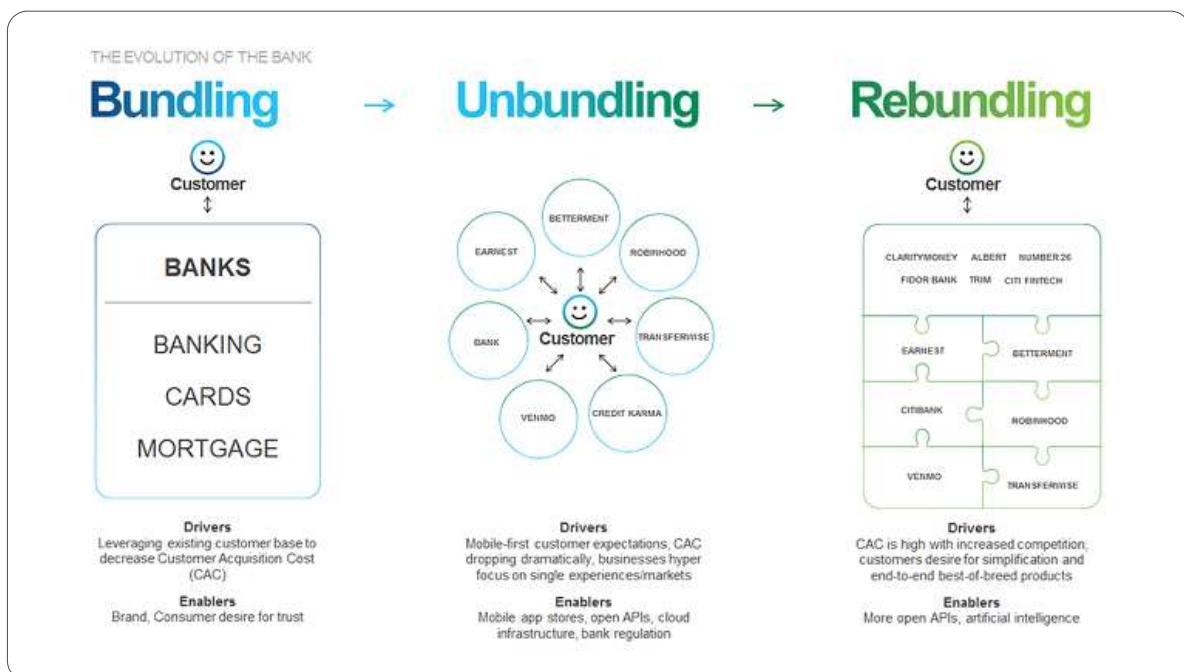
- 과거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시장참여 대신 모두가 디지털 연결상의 노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짐.
- 셋째,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은 디지털 경제의 동력으로서 모든 경쟁력의 기반역할을 수행하게 됨.
- 단 물리적 경제의 원유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데이터 재원에 대해 어떻게 경제적 평가와 보상이 가능해지는 지에 관한 이슈는 아직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단계가 아님.
 - 다만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GDPR이나 PSD2차원의 논의는 전개된 바 있으나 이는 모든 데이터 주체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미래생태계 조성의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함.
 - 관련하여 데이터 협동조합(data coop)은 기존의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던 이익을 데이터 분야에서 지켜내려는 움직임으로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보호와 활용방안에 관한 제안이 제시됨.
 - 즉, 커뮤니티 차원의 데이터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의 보상이 일반인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험할 필요.
 - 완전한 탈중앙화 환경이 부담스러운 대다수 시민들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동조합방식의 기구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넷째, 스마트 규제에 틀은 과거 책임소재가 분명한 지배구조를 넘어서 연결된 환경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 가능함.
- 다섯째,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지배구조와 기구확충, 그리고 연결고리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설계가 진행될 필요
- 이와 같이 기존 신뢰기반에서 작동했던 특정 기관위주의 방식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경제행위가 토큰화와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안보 위협요인으로 확대가능성

[그림 2] 데이터 활용관련 인프라 구축과 범사회적 원칙수립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key to designing sustainable data cooperatives, 2022

[그림 3] 근본 차원의 재편과 미래성장기반구축



자료: Citibank. <https://brunch.co.kr/@manhowon/7>, 2020

-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관리하려면 디지털 전환으로 불가피해진 본질적 차원의 변화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형평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시스템 차원의 고민이 필수적임(과거에는 전담기구 내지 기구간의 협업을 통해 대응).

[그림 4] 디지털 금융의 기본 요소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전략의 방향을 개방적인 디지털 금융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 그러나 단순히 전환을 위한 전환이라기보다 산업차원의 변화를 수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궁극적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금융도 이러한 기능수행이 효율화되어야 함.
 - 이러한 근거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규제체계의 틀을 지켜가면서 금융안정과 포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가능하기 때문임.
 - 기존 레거시 체제하에서 이러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디지털 환경이 허용하는 폭발적 가치상승 여력(scalability)은 기대난망.
 - 디지털 환경이 허용하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오로지 디지털 환경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바로 이점이 미래의 금융이 디지털 금융이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임.

1. 디지털 금융 발전의 필수요건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 협업(partnership-based solutions)도 궁극적으로 부산을 위한 부산에 의한 전략이지만 글로벌 요소를 포용할 수 있는 초월적 개방자세가 필수적

- 민관 협업도 특정기구나 조직중심의 참여자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누구나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설립과 개방형 지배구조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관한 mandate를 일종의 사회계약으로 명시할 필요
- 일종의 특구 전략으로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는 어떠한 요소도 받아들이는 자세와 누구라도 참여를 허용하는 원칙이 글로벌 차원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과거 홍콩특구전략)
- 지금까지는 정부나 공공기간의 출선수범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발전 요소들을 함양하고 새로운 혁신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디지털 환경이 우세해지면서 민간들 스스로 직접 변화흐름을 파악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진 상태
- 특히 공공기관중심의 인프라는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가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제적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고 당장 시장 인프라 차원에서 결여된 신규형성 시장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에 나설 필요
- 즉, 민관이 합동으로 디지털 환경의 대두에 필요한 제반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협업구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

□ 이는 민관의 역할이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정부중심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수직적 통합이 아닌 민간들끼리의 수평적인 연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야 함을 뜻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함.

2) 배후산업기반과의 우선적 협업가능성

□ 디지털 전환은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을 내포하므로 모든 기존 산업계의 참여자들이

스스로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목소리가 개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함.

- 부산은 물류, 조선 등의 중후장대산업비중이 높은바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용의 불안요인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노조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일부라도 반영시키는 기회를 확보해야 함.
- 다만 당장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외에도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는 의견개진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

□ 부산의 입지와 배경을 최대한 반영한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한바 관련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이하 DTI)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을 준비할 필요

- 특히 공급망 재편관련 유럽을 중심으로 ESG실사법(ESG compliance guideline)³⁾의 적용이 구체화되는 상황이므로 다방면에 걸쳐 미래산업에게 요구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지의 여부를 수시로 검증해야 영업이 가능함.
- ESG기준충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Digital Twin전략⁴⁾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역량을 금융측면에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비할 필요

□ 균형잡힌 디지털 전환을 가능케 하려면 기존의 담보체계나 위험관리원칙이 공히 적용되는 레거시 금융에서는 역할자체가 제한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

- 레거시 금융이 신규산업니즈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파악과 공유, 분산기능을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별도 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강조할 필요
-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당장의 효과는 있지만 초기 위험파악자체가 어렵고 공적 재원이 위험추구행위에 연동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므로 시장흐름에 밀착한 당사자들 우선의 디지털 금융역량이 핵심으로 작용할 필요

3) Alamillos and Mariz, 2022, J. Risk Financial Management 15, 291.

<https://doi.org/10.3390/jrfm15070291> <https://www.mdpi.com/journal/jrfm>

4)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의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 디지털 트윈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비용절감은 물론 ESG 실사기준을 만족시키는 제반 결정에 크게 기여

3) 데이터 자원의 발굴과 인프라 구축

- DATA활용을 위한 AI역량구축과 새로운 시장관련 심층연구는 필수적인 준비과정임.
- 디지털 금융이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는 근본적으로 데이터 경제로서 기반 인프라는 블록체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정책의 틀도 과거와는 달리 상호 의존적인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연관이 자체적 플랫폼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전략이 중요해짐.

4) 플랫폼 규제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화작업

- 디지털 전환은 결국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 가능해지므로 이와 관련된 각종 분석도구가 다수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
- 유럽의 GDPR, PSD2는 물론 MiCa 등 디지털 자산 규제에 이르기까지 입법취지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조기에 시행할 필요
- 각종 시장 인프라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전환 과정의 사회적 갈등비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리 없이는 전환자체의 동력이 저하되기 쉬움.

5) 글로벌 디지털 전환기구의 설립과 개방형 지배구조

- 일견 탈중앙화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전환추세는 자칫 자체적 모순을 내포하는데 분명한 점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주요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임.
- 특히 민간주체들은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원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최근 FTX사태에서 목도하듯이 탈중앙화나 토크노믹스(tokenomics)의 한계가 분명해진 이상 민관의 힘겨루기 양상보다는 협업을 통해 새로운 환경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공공부문은 연결환경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바 자칫하면 민간영역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
- 그러나 공공부문이야 말로 다양한 이해상충이 노정되는 디지털 시장에서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 공급의 책임이 있음.

-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기반을 둔 각종 규제가이드라인은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 디지털 금융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기반에 관해 보다 수평적이며 분산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음.

- 부산은 이니셔티브의 주창주체로서 가시적 결과를 추구하기보다 미래 생태계발전에 필수적인 제반 요소들이 함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 현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면서 미래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금융역량을 키워가는데 주력해야 함.
- 가장 큰 문제는 네트워크 기반 시장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 지배구조상의 한계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주체를 설립하거나 유치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

□ 금융허브 추진 주체를 보다 분산되고 개방된 구조로 진화시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할 필요: 이는 부산시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난 별도의 법인 내지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뜻하며 별도법인은 부산발전의 청사진을 직접 주도방식이 아니라 민간참여방식으로 유도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

□ '준비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수평적 연관을 강화하는 오픈 플랫폼 접근방식과 새로운 ESG 평가기준

- 새로운 레거시체제의 자체 변신: AI기반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전략
-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환경과 글로벌 차원의 생존전략
- Auction 기능강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재정립, 디지털 독점에 대한 보상체계, 데이터 조합운동 도입

[그림 5] 디지털 금융리더십의 요소



- 이와 같이 디지털 금융을 전략적 목표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부산은 글로벌 차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부산의 지향점: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 허브

□ Connecting the dots! 자산운용, 무역금융, NFT 등 특정 분야전략 특화대신 디지털 역량구축을 위한 자생적 포용적 전략으로 전환

- 기존 법체계 적용 + 미래지향적 포용성 제고= 사회적 공감대 확대
 - ▶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 금융허브: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
 - ▶ 시장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유연한 지배구조-부분적 탈중앙화 수용
- 코로나 사태이후 Big picture하에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구축
- 사업관련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글로벌 추세 파악과 글로벌 차원의 참여유도
- 금융혁신의 중심: 인력 연수 훈련 재교육의 메카(mindset)
- 개방적 기조유지로 글로벌 하우스의 시장 참여유도: 강력한 책임주의 원칙과 비

간접주의

- 자체적으로 수평적 연결이 원활해질 수 있는 스마트 규제환경을 조성하여 레거시 차원의 역량을 제한적이지만 차세대 디지털 전환의 선두기지 역할의 잠재력 함양
- 다만 더 이상 지향점을 중앙화된 기관중심의 발전전략에 두기 어려우며 보다 탈중앙화되고 새로운 참여가 허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 수직체계에서는 해법 난망
 - 디지털 인프라 포함 공공재 성격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야 하나 신규참여자들과의 협업 필수적: 법체계, 시장 인프라 등-digital social fabric
 - 시장수요발굴은 주로 민간들이 시장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균형생태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
- WEB 2.0에서 급격히 성장한 Big Tech은 지배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공공부문과 비슷한 제약 봉착(실질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거대기업임)
 - 결국 다가오는 환경에서는 속한 영역에 관계없이 효율적인 재연결 작업이 필수적: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포괄적 신뢰기반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특정 주체위주의 드라이브는 한계에 봉착할 우려.
 - 특히 부산은 가장 핵심적인 자유로운 기업여건과 이를 보장하는 공공부문의 의지가 핵심요소로 부각: 특구 전략의 타당성 검토
 - 디지털 금융허브의 지배구조는 최대한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유지하면서 빅텍, 해외기업, 스타트업 등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허용
 - 이를 별도의 정부개입이나 지원없이 가능케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plug and play) 준비
- 메타버스까지 확장된 플랫폼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결노드간의 연결형태가 최대한 다면적으로 연결될 필요
 - 규제나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특구 형태로 확보하고 규제의 틀도 최대한 스스로 강구하도록 우선적 당국 접촉을 최대한 지양

3. 디지털 허브전략의 포인트: 경쟁요소간의 연관 극대화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제공

- 상호간의 연관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창출 전단계
- 디지털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연관에 필요한 환경조성
- 모범사례로서 재연결작업의 구체화 노력 필요
- (예) 글로벌 공급망 체계구축의 시범사례
-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용치 발굴 및 관련 전략수립: 국경간 지불결제분야 및 전반적 증권관련 청산결제서비스
- Industry 4.0을 위한 제반 네트워크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될 필요
-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파악 및 대응도 플랫폼 경제자체역량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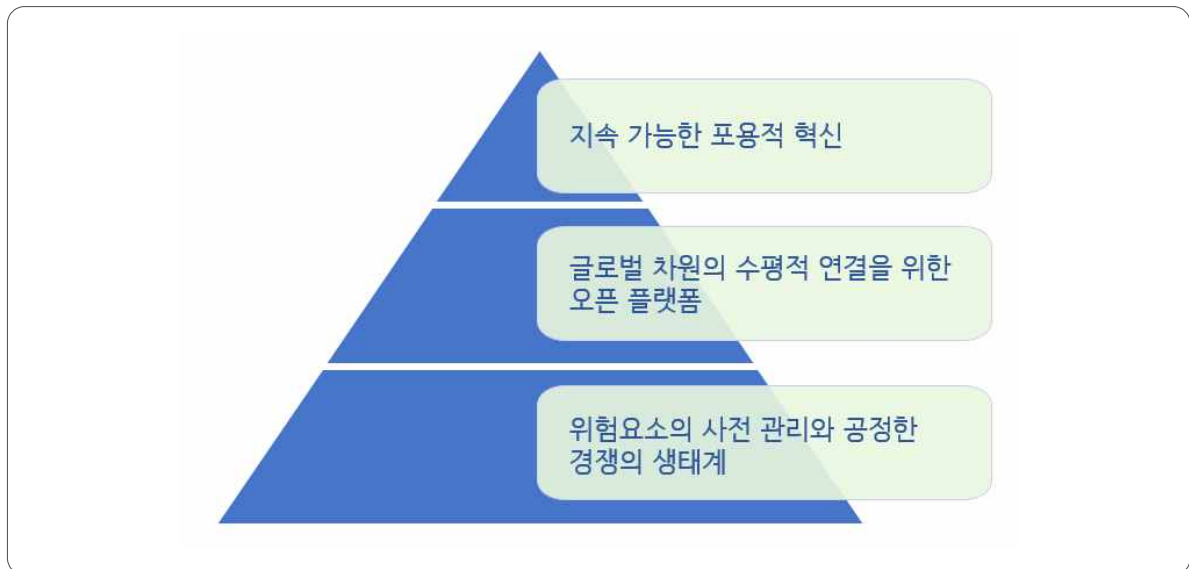
4. 디지털 허브전략의 위험요인 관리방향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Test Bed: Sandbox와 특구전략

- Digitalization은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초래
- 서비스의 규모, 노동활용도, 자본 및 인적투자, 기술요인과 확산정도, 금융, 법규, 정보 및 컨설팅서비스가 생산효율성과 노동생산성, 경쟁력과 직결
- 위험파악자체가 연결된 체인 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므로 기존 행정조직이나 기구가 아닌 민관협동이 전제로 이루어진 제 3의 기구에서 전담역할 수행할 필요
-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혜택과 위험을 파악하여 균형을 추구
- "economic security" 는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상태에 따라 정해짐
- 부산은 핀텍 이후 크립토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태동에 우호적 배경: 이미 블록체인 특구, 규제샌드박스 등 금융의 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시도와 검증 인프라 구축
- 향후 고령화와 연기금 관련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Wealth management, Premium Financing 등 세분화된 고객층에 직결된 서비스 제공가능 여건
- 관련된 법적 규제적 틀을 정비하여 자국 및 글로벌 회사들의 영업 메리트가 확보될

수 있는 환경조성

[그림 6] 부산이 추구하는 디지털 금융의 리더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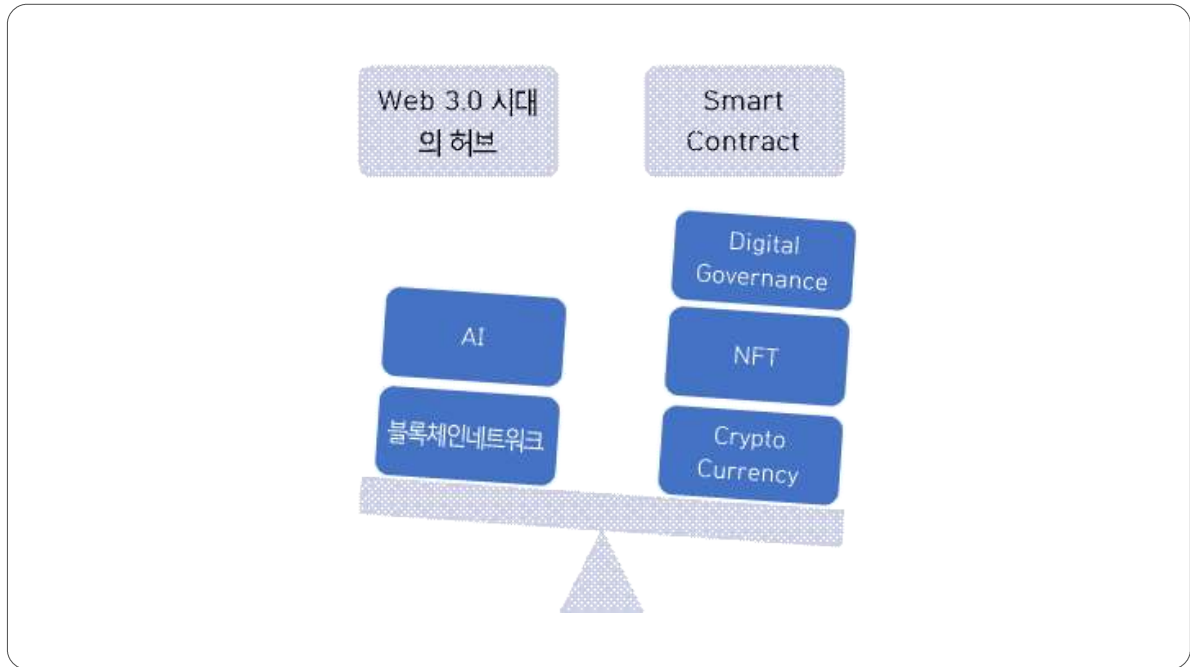


Ⅲ.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방법과 실행과제

- Ⅲ장에서는 급격한 환경변화로 초래된 부산 허브전략 수정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차원의 제안을 논의하고자 함.
 - 근본적인 차원의 준비가 필수적인 디지털 금융의 초석을 다지고 발전시키려면 모든 면에서 일대전환이 필요한 바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또 다른 도전과제임.
 - 이중에서도 지배구조관련 개선 필요성은 비경제적 요인까지 섭렵하게 되어 경제 사회적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산의 금융전략은 기존에 미처 거론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측면이 강함.
- 부산의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넘어서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요소의 변화를 통해 근본적 업그레이드를 가능케 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현재 글로벌 추세와 현실의 간극을 감안할 때 현재의 선택은 자체적 문제해결과 동시에 미래 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금융역량제고를 금융중심지 전략의 핵심과제로 설정.
 - 결과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기구설립과 운영을 통해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이슈에 대응하는 접근 방식이 타당함.
- 우선 디지털 금융 접근방법은 가장 글로벌한 이슈부터 시작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데이터나 규제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하는 것임.
- 즉, 디지털 전환이 전진기지로서의 자리매김을 추구하는 부산이 차세대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을 추구하고 디지털 금융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프로젝트에 전 세계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
 -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산 디지털 금융허브 전략은 사실상 국가 및 글로벌 전략으로서의 입지를 인정받아야 함.
 - 중심지가 왜 서울이 아닌 부산이어야 하는 부분은 부산이 성장의 초기단계에 있고 배후에 발달한 은행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레거시 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인 실험의 주체로서 부산이 적합하기 때문.
 - 즉, 부산은 서울과는 달리 개방플랫폼의 구축에 있어 레거시의 존재감이 덜 위협적이고 초기단계의 참여자들이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세함.

[그림 7] Web 3.0 시대의 핵심요소



- 연결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를 성과로 내세우기 보다는 다양한 연결자체가 우선시 되는 “무한 가능성의 환경”을 중시할 필요.
 -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지적 공감대와 의견교환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자생적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차원의 접근이 용이한 기구설립과 운영을 통해 디지털금융접근과 실행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체인력과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
 - 그리고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나 산하기구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어젠다를 선점하고 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이 공감대형성노력을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
 - 글로벌 이슈를 통해 내실을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려면 설립되는 기관의 운영도 철저히 개방되어야 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Open AI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
- 지방정부가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어가려면 이를 지휘할 수 있는 기구설립과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 다만 추진 기구는 과거의 것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지배구조와 시장 내의 위치를 점하게 됨.

- 부산의 금융중심지라는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요소를 포용하고 자발적 연관을 보장하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제반 원칙을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함.
- 바로 이러한 일관된 약속을 통해 디지털 혁명에 필요한 환경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게 됨.
- 이러한 기초를 배경으로 기존의 진화와 새로운 요소의 조화로운 병행과 발전이 가능해지며 부산은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접근 방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는 새롭게 설립되는 기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합의구조가 단순히 부산내의 합의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합의구조에 바탕을 두어야 필요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임.
- 개방된 지배구조는 전통적인 합의방식이나 제약에서 자유롭게 글로벌 차원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다듬어져야 하며 지배구조와 합치하는 기구에서 실행과제를 조율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
-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접근방법상의 특징은 환경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데이터 자본의 활용을 통해 신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1) 데이터의 수집, 분석과 활용에 필수적인 AI역량을 갖추고 2) 이를 다수의 참여와 연관을 촉진시키는 블록체인기반위에서 활용하게 하며, 3) 이 과정에서 스마트계약과 빅데이터 활용시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배구조차원의 대응방식을 준비하는 것임.

□ 결국 디지털 금융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디지털 산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참여 가능한 디지털 경제의 구현을 앞당기려면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구체화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플랫폼으로서 부산의 역할이 부각되도록 설계.

- 이를 구현하려면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민관협동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이 조직의 자본토대 등에 관해 자발적 협력차원의 논의가 개시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클라우드 보관서비스, 데이터 댐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시급한 실정,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국익우선의 틀에서 개별적 디지털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는 현 여건에서 필요한 개방된 지배구조의 기구확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1. 디지털 기구확충의 문제

□ 지방정부로서 글로벌 이슈를 발전전략으로 선점하도 보니 관련 인프라 규제감독 차원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 따라서 큰 그림하에서의 추진은 별도의 글로벌 기구를 신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

- 실제 디지털 전환은 레거시 체제보다는 신규체제 위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현상 유지적 동기로는 점진적 변화(incremental change)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의 기반을 민관 협동기구를 통해 구현해 나갈 필요.
- 디지털 금융의 접근방법은 빅뱅(big bang)식으로 개방과 혁신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가적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부산을 통해 추진하는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함.
- 단,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면 배후에서 큰 그림차원의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전제되어야 함.

□ 이밖에 지리적 제약이 극복될 수 있는 구체적 공간은 메타버스인데 부산 특구전략은 물리적 공간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이와 같은 접근방법의 핵심은 직접적인 성과를 위해 선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별도의 기구를 사이버 공간에 설립하여 미래 시장인프라를 갖추는 것임.

글로벌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전략

-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받는 경쟁요소를 유치하여 여건을 조성하려면 과거 방식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의 여건조성에 주력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략 즉, 차세대 디지털금융 혁신허브로서의 부산이 강조되어야 함.
 - 기존의 직접적이고 가시적 노력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적 우월성을 부각시키려는 관점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빅픽처를 통해 우회적이지만 기초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이러한 시각은 결국 디지털 경제의 핵심경쟁력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사태이후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논의에서 확인하듯이 연결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환경과 글로벌 차원의 생존전략만이 경쟁력 단위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핵심요소임이 입증됨.
 - 또한 이러한 전략의 근간은 결국 기존 방식에 더하여 수평적 연관을 강화하는 오픈 플랫폼 접근 방식과 새로운 ESG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임.
 - 따라서 미래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서 부산을 부각시키려면 개방플랫폼의 형성과 운영에 필수적인 AI기반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전략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흐름에 직접 맞닿아 있는 국제기구의 운영을 통해 가능해짐.
-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전략수립에 의존해야만 하는 근거는 도약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이 과도할 정도로 많고 이를 개별적으로 충족시킬 방법이 없음.
 - 개별요소의 충족이 가능하더라도 결국 글로벌 시장 수요와 맞닿아 있으려면 흐름에 부합하는 변화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의 기구나 특정 부처 산하기구의 운영으로는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

2. 차별화된 핵심전략: 다면적 연결조성자 역할

디지털 시대의 가치창출기반인 플랫폼이 증시되는 상황에서의 허브역할은 경쟁력 요소들이 자유롭게 연결되는 자유롭고 개방적 여건을 앞당기는 데서 입증됨.

- 플랫폼 확장을 위한 Test Bed역할: 새로운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빠른 기술 변화와 실험정신 포용의 필수적 검증과정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시장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
 - 책임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은 차세대 성장엔진의 핵심인 “기술혁신과 규제개혁”에도 가장 중요.
 - 특히 국경을 넘어선 전면실시에 필요한 다면 검증이 어려우므로 부산의 특구 샌드박스 전략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
 -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주도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협업문제들이 난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자산규모, 해외유치실적이 아닌 혁신 친화적 역량자체를 목표로 함.)

3. 배후 경제와 연결기반의 특성: 플랫폼 전략과 관리의 필요성

- 과거와 같이 중간역할을 수행하는 신뢰주체들의 역할 없이도 수평적 연관이 수월해짐에 따라 플랫폼 차원의 패러다임 정착으로 시장도 점차 다면화되는 특징(다만 초기 적응기간 중의 WEB 2.0에선 수직적 연관이 유효한 상황)
 - 그러나 디지털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점차 중앙화된 플랫폼 경제의 모습이 강조되는 경향: 따라서 플랫폼 경제의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중요함-끼리끼리의 연관강화, 양극화 심화에 대한 정부역할 중요
- 디지털 기술은 원천적으로 포용적 참여를 가능케 하지만 실제로는 입증된 경쟁요소간의 재연결을 강화하는 경향
 - 따라서 정부나 공공부문영역의 기구에서는 재연결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생산요소 결합이 무시되지 않도록 준비(다양한 linkability제고)하고 지원할 필요: WEB 3.0

- 민간주체와 공공부문 주체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며 다면적 시장에서도 고유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협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공감대 구축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부각됨.
 - 기존의 우월적 시장지위가 수직적 연결위주로 구체화되지 않도록 연결관련 인센티브 점검과 균형적 지배구조 개선 필수
- 전략수립과 특정 기능수행에 있어 AI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배구조상의 특징을 반영: 현재의 지배구조나 기구조직으로는 디지털 금융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기 어려움(AI for governance issues의 중요성).

[표] Web의 발전경로

Web 1.0	Web 2.0	Web 3.0
읽기	읽기 쓰기	읽기 쓰기 소유
접속 및 검색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데이터 소유와 거래
개인 PC	플랫폼	블록체인네트워크
포털 사이트	SNS	NFT, DeFeo, DAO
Google, Yahoo	Facebook, Youtube	Dapper Labs, Meta Factory

- 시스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존체제와 지배구조상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립 또는 유지하고 이들 간의 협업을 통해 미래전략의 조율과 확립이 가능해질 수 있음.
- 현 생태계는 과도하게 분절되어 있으며 좋은 연결을 정당화할 단계까지는 많은 준비와 실험, 그리고 검증절차가 필요함.
- 결국 부산이 중심지로 부각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개방 플랫폼에서 구현: 혁신에 대한 다면적 평가와 검증과정을 허브전략의 핵심으로
- 개인 프라이버시 중시되며 “연결된 서비스 창출구도”가 아니면 수요충족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일로식 구도 하에서 이를 정당화할 여건확보 어려움: 부산의 오픈 플랫폼 역할 필수적

- 다만 현재의 우리나라 법체계상 기준으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판단 애로가 존재하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
 - 따라서 초기 시장지위 확대나 유지를 위한 검증되기 어려운 혁신과 탈중앙화는 Ponzi 양상 불가피
- 새로운 환경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협업구조를 통해 대응하되 공공 원칙은 보다 강력히 준수해야 함(다면적 DIGITAL COMPLIANCE).
- 진정한 새로움은 더 많은 준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한 부산의 전통을 근거로 미래 변화에 대응
 - 모든 경제주체는 과거의 영역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새로운 입지와 역할을 모색할 필요(디지털 연결로 인해 플랫폼화는 불가피한 추세)
 - 글로벌 차원의 정보 교환 창구로서 플랫폼 정부는 과제별 디지털 전환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다방면의 요소를 취합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개별적 과제추진조차 공동의 생태계 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
 - 미래준비에 필수적인 기본적 가이드라인과 법규방향을 구체화: 단,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 창출주체로 나서는데 신중할 필요
- 과도기적으로 정부는 중앙집중화 칸막이식 조직과 병행하면서 오픈지배구조 성격의 TF형태로 운영되는데 디지털 플랫폼정부의 활동에 기반을 둔 다방면의 경쟁요소를 포용과 공유
- 디지털 플랫폼의 디자인에 따라 생산요소 결합방식과 생산성의 차이 불가피한데 결국은 상호운영성의 제고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이 최선의 선택임.
 - 허브전략추진 주체는 밑그림을 제공하되 실제 참여와 연관은 전적으로 철저하게 시장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

4. 디지털 자산의 도입과 활용

- 글로벌 차원의 안전자산 수요 증가, 위기국면에서의 현금부족현상 장기화
- 그러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급차원의 준비 미흡, 지배구조의 분열화, 조율부담 가중,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존체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
- 분산화된 시스템을 수용하여 스스로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관련 기구나 장치를 개발 공유
- 제도권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에 참여할 필요
- 블록체인 기반의 레저시 주도 금융효율화: 국경간 지불결제시장 혁신의 중심지 (mCBDC arrangements)로 제한적 효과
- 디지털 자산의 도입은 모든 주체들의 미래변화준비에 우호적 여건 마련
- AR-based Training을 통해 메타버스 역량구축

5. Web 3.0 연결방식에 대한 시사점

- 지배구조의 변화 없는 효율성 추구는 현 시스템의 독점화에 기여: WEB 2.0 → Web 3.0
 - Web 2.0에서 경험했듯이 디지털 환경하의 재연결 방식은 또 다른 독점 및 중앙화로 연결(탈중앙화의 핵심주체에 비해 중앙화 기구의 역량이 월등하게 우월)
 - 우리나라는 거대기업과 빅텍, 그리고 정부산하기구 중심을 생태계가 발전하였으므로 연결방식을 일거에 수평적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일반 개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구축에 있어 상호운용성을 지키면서 쏠림현상을 방지하려면 연결방식에도 균형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떠한 지배구조도 이를 보장할 기구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래에도 거대 회사위주로 재편성-고용효과 제한적, 사회구조적 문제야기 위험이 있으므로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균형은 미래지배 구조의 핵심사안으로 남아

있음.

- 다만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나가는가의 이슈는 아직 해결된 바 없으므로 향후 AI를 활용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 기술측면의 상호운용성과 적응적 제어기술에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현실적 중요성은 전례없는 조직차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WEB 2.0 디지털 플랫폼은 국가중심의 각종 규제에 세분화 분열화되어 있음: 이는 연결환경의 초기개발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

□ 따라서 지금의 구도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WEB 3.0 환경 하에서만 디지털 혁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분야의 발전에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실정.

- 중장기 및 양극화 위험관리 친화적 디지털 전환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려면 디지털 자산의 활용준비와 글로벌 공급망 체계구축:
- 데이터 활용 증대와 연관된 제반 이슈에 대한 미래지향적 방향도모
- 인력양성 및 글로벌 가이드라인 조율
- 플랫폼차원의 디지털 혁신관련 지표개발 및 모니터링: ESG 차원의 network effect를 준수하여 구성의 모순배제
- 과거의 기관 등 경쟁력 유치전략과 차별화: 디지털 플랫폼과 수평적 연관에 기초한 혁신주체로 변신
- 주체세력의 배후화와 생태계 차원의 관리: 역할재정립

6. 부산 디지털금융 허브전략의 핵심: 레거시 체제와 대안을 동시에 수용하는 절충형 지배구조와 시장주도전략

- 글로벌 차원의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라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통해 단기적으로 성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하여 진행하는 자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검증절차 수행(해외기구유치에 있어서도 호스트 국가의 요구사항을 협약차원에서 미리 개진 가능)

- 데이터 재원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조율주도 및 준수
-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보안 프로토콜 포함 각종 인프라
- 디지털 시장의 다면적 검증과정(test bed)을 주도하는 포괄적 분석 허브전략
-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대규모 연수훈련프로그램 (해외기구와 협업)시행
- 규제샌드박스의 글로벌 연계 확대와 Exit전략 제공

7. 비현실적(?) 목표와 현실적 접근: 글로벌 지배구조와 디지털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

- 디지털 허브를 위한 청사진과 로드맵의 핵심사안: 디지털 금융허브 역할의 핵심은 기술과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가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달려있음.
- 기술과 규제 모두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균형을 찾을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불가피하므로 심층연구가 다각도로 필수적인 상황
- 레거시 체제의 인프라만으로는 변화무쌍한 시장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움: AI-BIG DATA 스타트업 적극 활용하여 자체 연결고리 모색
- 효과적 답변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들의 자발적 협조와 창의력에서 찾아야 함.

□ 부산의 디지털 허브전략은 핵심경쟁력 확보를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나 디지털 자산의 발굴과 활용기반 구축은 WEB 3.0과 Industry 4.0 시대의 핵심관건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시장구조의 변화 미흡결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함.
- 새로운 수요의 파악과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창출: “혁신자체”보다는 문제해결용 “혁신드라이브”를 위한 시장기구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당장 이윤에 집착하지 않는 혁신 펀딩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필요
- 따라서 부산의 디지털 금융 리더십은 단순히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Web 3.0 시대의 고객중심 금융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 이러한 변화는 패러다임상의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금융을 재편하고 전환과정상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제반 인프라와 규제감독체계의 수용을 전제로 하게 됨.
- 목표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변화에 대한 시장인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변화를 앞당기려는 외부적 요인을 활용한 내부적 혁신 전략임.

□ EU가 차세대 성장엔진에 필수적인 제반요소에 관한 규제의 틀과 실사법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기업들에게도 해당되므로 금융은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자체적 준비에 나서야 하는 실정.

- 특히 기업이나 시장규모, 가격산정 전반에 대한 ESG차원의 원칙준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바 디지털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은 기업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역량을 확충하는 것임.
- 규제차익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디지털 환경은 기존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므로 이에 대비한 실물과 이를 파악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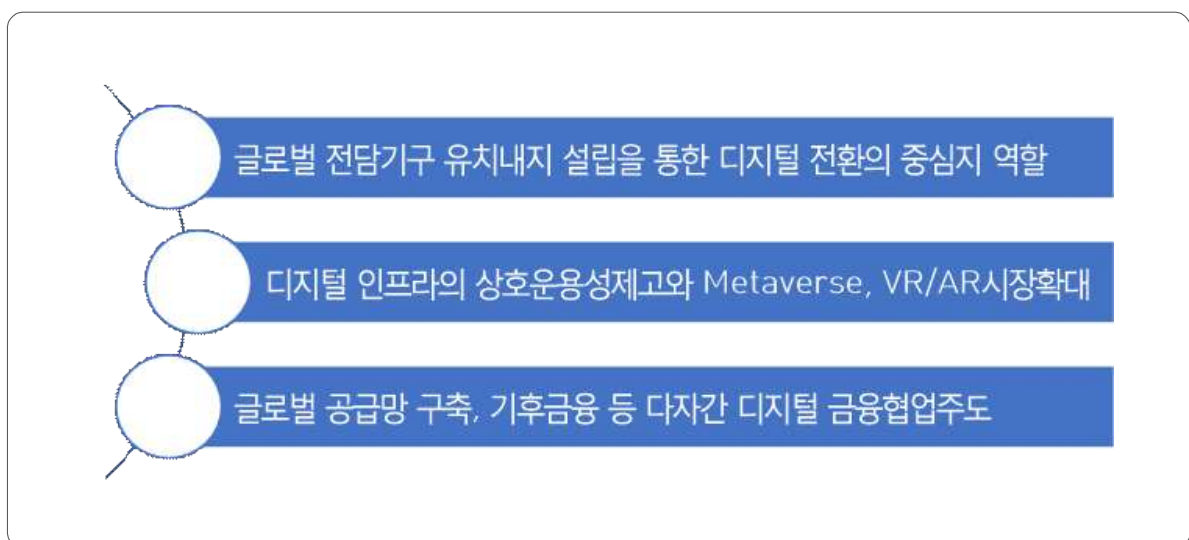
□ 이상의 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디지털 금융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단위의 경쟁력파악은 물론 제반 연결고리 파악에 기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ESG 원칙에 부합하는 공급망 구축과 개개인의 니즈에 특화된 현실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
- 디지털 금융은 준비과정부터 관리하고 준비해 나갈 경우 피해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 경제가 추세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전할 것이므로 환경에 부합하는 측면
- 부산이 이러한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디지털금융의 성공요소를 조기부터 충족시키려는 포용적 전략을 구사해야 함.
- 이를 위한 기술적 규제적 측면이 공히 강조되어야 하는 바 기술은 여러 방식의

결합(composability)을 통해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DTI역량까지 지원해야 하므로 관련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시급함.

- 부산은 스마트 도시와 같은 프로젝트의 발주나 EXPO유치, 각종 전시회를 통해 차세대 경쟁요소들이 책임있는 혁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모든 기반과 배후 여건을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필요
-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민관협동의 특화기구를 설립하고 스마트 산업기반 조성이나 시티 건설과 같은 구체적 프로젝트를 공표함으로써 관련 경쟁력을 조기에 선점하고 자체적인 연관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필요
- 지금과 같이 기존 레거시 차원의 금융을 벤치마킹할 경우 추가적인 전환부담요인을 떠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략적 타당성 상실로 이어짐.
- 부산은 기존의 허브전략을 통해 구축한 역량을 신뢰의 기본 축으로 활용하고 이에 더해 민간들의 창의적 노력을 유도하여 다이내믹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 확보

[그림 6] 금융허브를 위한 실천과제



- 언젠든 유동적인 레거시 차원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시장기반을 선점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새로운 인식전환에서 앞

서 있는 부산이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음.

- 디지털 금융의 정착에 필요한 자율과 개방, 그리고 자유의 환경에다 위험요소를 선별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강력한 법규준수의무를 시장 친화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방면의 인프라 구축할 필요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가면서 데이터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과 같은 솔루션을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으로 확산시킬 필요

IV. 디지털금융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1. 부산의 미래 선도도시로서의 입지강화

□ 디지털 금융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관련 역량을 포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구축하고 제공하는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

- 거의 모든 국가가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통합된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국경간 거래의 마찰요인도 규제상의 이질적 배경으로 여전히 상존하는바 디지털 역량의 허브도시로서 부산의 입지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측면
- 디지털 하드웨어역량은 우수하지만 규제체계나 자유로운 경제활동 관련 여건은 불리
- 따라서 부산은 핵심적인 디지털 금융역량의 글로벌 차원 소싱을 통해 핵심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AI가 접목된 새로운 기회창출의 보고로 자리잡게 됨.
- 디지털 허브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의 구축과 경제 패러다임의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전환노력을 구체화하는 결정적 역할
- 특히 데이터 경제의 작동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스마트 규제체제도 별도의 경쟁력 요소로 부각되므로 새로운 경제구현에 필요한 핵심적 요소들을 디지털 금융발전을 통해 확보하게 됨.

- 내용면에서 보면 부산이 시도하는 디지털 금융 이니셔티브는 본질적으로 부산이 추구하는 부산의 전략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를 선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추진방식을 지방 정부로서의 추진이라기보다는 **국가적 내지 글로벌 차원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고 추진해야 함.
 - **글로벌 이슈를 왜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1) 부산이 유일하게 개방된 사고로 지금까지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 왔고 2) 레거시의 그늘이 비교적 열리며 3) 주어진 여건자체가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공히 참여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 반면 현 여건 하에서 미래지향적 목표대신 배후산업과 부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목표로 설정할 경우 디지털 도약을 통한 허브역할은 무의미할 수도 있음.
 - 특히 굳이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부산에 특화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조되지 않는 과제를 왜 채택해야 하는가? 라는 부산의 관점은 글로벌 차원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진화해야 함(부산은 글로벌 차원의 허브역할을 추구하고 있음.)

1-1. 부산은 차세대 디지털 혁신 허브로서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showcase

- 부산은 범세계적인 AI 및 데이터 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디지털 자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제반 연구 및 검증 주도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디지털 공급망 구현에 필요한 제반 연구 및 시장의견 수렴역할도 주도
 - 부산의 역할을 통해 가시화되는 디지털 전환은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수의 참여를 허용하는 포용적 지속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ESG compatible)
 - 부산은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주도하는 밑그림을 제공하는 실질적 개방 플랫폼의 허브역할
 - 지금까지의 제약요인들을 디지털 역량과 개방형 지배구조를 통해 더 큰 그림하여

서 극복하는 차세대 리더쉽의 모습구현

1-2. 부산 디지털 금융허브는 “메타버스 시장개척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BUSAN INITIATIVE: 디지털 허브 = 미래의 성장 동력

- 부산은 단기적 변화보다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역량의 허브역할 모색: 개방 마인드와 적절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기술과 규제기반)시 디지털 금융의 허브 지위 모색가능
 - 개방적 마인드+미래지향적 전략을 위해서는 **데이터 자원 확보와 디지털 자산 포용, 그리고 다면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글로벌 연계**가 핵심임.
 -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응역량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수적: 특히 데이터 관련 제반 인프라 구축(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포함)
- 지원센터로서의 디지털 전환지원 전담기구 설립과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포용을 위해서는 여건 조율을 위한 심층연구와 규제체계의 정비 및 문제인식에 기초한 공감대 확산이 절대적
 - 결론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준비에 적합한 부산의 지경학적 여건은 그동안 혁신의 일관성을 보여준 부산에서 제공 가능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미래를 앞당기게 됨.
- 구체적인 실행과제는
 - 첫째, **특구 설정과 더불어 전담 추진기구(개방형 match maker역할)설립**을 통해 개별 국가차원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존 법과 규제체계와의 불일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플랫폼으로서의 입지 확보
 - 둘째, **디지털 전환 및 메타버스 관련 각종 세미나 전시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주도 (실제 회의나 세미나 외에도 사이버 공간상의 미팅도 주도하는 적극성)
 - 셋째,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여 자체적 생태계의 육성을 도모하고 관찰되는

신규로 형성되는 시장의 잠재적 작동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규제체계에 반영 (AI-assisted ESG compliance)

- 넷째, 허브전담기구의 지배구조는 특구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배려 하되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초기 자본토대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
- 다섯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원칙 하에서 AI engine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되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합의된 조직 개발에 나설 필요

2. 미래경쟁력의 핵심요소확보: 안정적 지속가능 성장

- 부산주도로 구축하려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네트워크”는 ESG차원에서 오로지 준비된 주체만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이 강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확보할 경우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상당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특징.
 - 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변화의 추진력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제한된 플랫폼 상에서는 구현불가능하고 오로지 거대시장의 다수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성장 동력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개방전략의 주체로서 부산이 스스로 익숙한 틀을 벗어나려는 자리매김을 해야 함.
 - 지방정부가 아닌 미래변화의 주역으로서 열린 리더십을 발휘하되 주변의 모든 경쟁력 요소들을 포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결실이 주변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부산자체의 격상으로 이어지는 근본차원의 우회전략임.
- 일대 구조적 전환기에는 목표는 높이 잡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변화를 최대한 자체적 경쟁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당장의 시장참여자들은 자체 이익 보호를 위해 변화자체를 거부할 유인 존재).
 - 자유로운 글로벌 실험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여 차세대 미래지향형 포용적 금융의 모든 요소들이 부산으로 집중될 수 있는 개방여건 조성에 주력.
 - 디지털 금융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은 민간의 창의력이 공적인 규제의 틀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혁신요소가 결합될 수 있는 혁신플랫폼을 제공

환경임.

- 이를 위해 상이한 배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특구 전략과 민관중심으로 다수의 참여로 작동하는 지배구조의 특수 국제기구의 유치나 설립을 제안함.
- 즉, 지리적, 관할 구약적 제약(jurisdictional constraints)에서 벗어나 가장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금융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개방적인 글로벌 실험기지의 역할 모색

3. ESG 원칙을 내재화 시킨 디지털 금융은 글로벌 생태계 육성도 기여

- 부산이 주도하지만 결코 부산만의 이슈가 아닌 국가 내지 글로벌 차원의 중요성을 가지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해외기구의 유치내지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해 내부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필요: World Economic Forum, UN 디지털 전환기구나 BIS의 Innovation Hub, 기후금융의 GCF(Green Climate Fund)등 정책 및 연구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전환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심층적으로 폭넓게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
- 부산의 디지털금융 관련 Research Network Center로서의 리더십을 통해 차세대 책임있는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관한 핵심역량을 구축가능함
- 국제적 디지털 중심기구가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금융역량이 확충되고 다양한 산업기반이 조성되는 동시에 기존 레거시 체제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사실상 ESG관련 모든 분야의 미래이슈 전담기구를 network of centers방식으로 부산이 관리함으로써 관련 핵심 역량을 글로벌 하게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미래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
- 모든 인류의 복지를 위해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ESG차원에서 레거시 체제의 전환비용을 감안하고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이 가능해야 현실로 자리잡게 됨.
- 따라서 개별 국의 차원의 드라이브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칫 상호운용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바 부산의 위치를 격상시키려면 현 글로벌 지배구조하에서 결여된 디지털 혁신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임.
- 특히 다수의 공공적 혜택을 균형 있게 일관되게 전달하는 핵심역량을 목표로 간주하

고, 흔히 경험하는 집단이익화나 중앙화, 그리고 끼리끼리의 문화 등에서 배태되는 각종 위험요인을 수시 감독과 모니터링 가능한 인공지능활용을 통해 보완해가면서 전략적 모니터링을 구사(Leveraging AI strategy for compliance).

-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실험대로서의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는 차세대 경쟁요소를 직접 체험하면서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구축하게 되고 실제 스마트 산업의 발전토대를 확보하게 됨.
- 결과적으로 과거의 전략은 부산중심의 경쟁력 집중 전략이었지만 **미래전략은 글로벌 중심으로서 경쟁력 기반확보가 목표임**. 미래시장을 준비하는 차원의 글로벌 수요는 당연히 경쟁력기반이 구축된 부산에 집중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짐.

[그림 8] 미래경쟁력을 현실로 가져오는 “Back to the Future” 전략

